

국민 3명중 2명 “5·18 헌법전문 수록 찬성”

5·18 38주년

보아라 오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5·18을 왜곡·비방한 사람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5·18 진상규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18기념재단은 ‘2018 5·18 인식 조사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5·18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가인 쉼나우엔픽처에 의뢰, 지난 4월 한 달간 성인

5·18재단 인식 조사…60% “국가폭력에 정의로운 저항”

해결과제, 책임자 처벌·진상규명·명예회복·보상 順 응답

(만 19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진행했다. 설문에서는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동의 여부를 새롭게 넣었다. 응답자 66.7%가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40.8%, 약간 동의한다 25.9%)는 의견을 보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11.5%다.

인터넷 또는 대중매체에서 이뤄지는 5·18 왜곡·비방행위에 대해서는 33.1%가 ‘매우 심각’, 32.1%가 ‘약간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5·18 비방·왜곡 행위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매우 그렇다’가 29.1%, ‘그렇다’가 33.1%였다.

5·18과 관련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이 59.7%로 가장 높았으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역사’가 33.9%로 뒤를 이었다. ‘불순세력(북한 등)이 주도한 폭력사태’라고 대답한 사람도 6.1%에 달했다.

‘5·18 진상규명이 잘 이루어졌다’는 질문에는 54.5%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7.4%, 별로 그렇지 않다 37.1%)고 응답했다.

세부 항목으로 학살책임자 처벌에 대해

서는 73.3%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피해자 명예회복에 대해서는 58.1%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피해자 배상도 56.6%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가장 해결이 미흡한 과제는 ‘책임자 처벌’(41.7%)이 가장 높았고 ‘진상규명’(33.6%), ‘피해자 명예회복’(10.5%), ‘피해자 보상’(10.3%), ‘기념사업 추진’(2.4%) 순이었다.

해결 미흡 이유로는 ‘과거 정부 인사의 집단적, 조직적인 책임 회피’(25.3%), ‘주요 책임자의 소극적 처벌’(21.0%), ‘정부, 국방부 등 관련 자료 비공개’(19.7%), ‘가해자 등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 거부’(13.9%) 등이 꼽혔다. 응답자의 79.7%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용희기자 kimyh@



대한태권도협 5·18 묘지 참배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 임원, 심판단, 선수단 대표들이 10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분향한 뒤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이들은 11일부터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리는 5·18추모기념 전국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에 참가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조정 무산

임금 인상 등 입장차…2차 기간 조정 못하면 파업 불가피

광주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 결렬로 1차 조정기간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1월 16일부터 시작한 사측과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25일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 이날까지 1차 조정기간을 거쳤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의 10% 인상, 현재 9호봉에서 10호봉 신설, 대형버스 운전원 정년 60세에서 61세로 연장, 중형버스 근

무제 격일제에서 1일 2교대로 전환, 중형버스 근로자 계약 기간 1년 주기에서 65세까지 무기계약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내용 가운데 중형버스 근로자 근무제 1일 2교대 전환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측은 그동안 임금인상 폭이 매년 2.5% 안팎이었던 점을 들어 10% 인상은 힘들고, 정년 연장 등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위원회 2차 조정기간에 노사 양측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파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비노조원과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 시민 불편이 없도록 상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10일 자정까지 노사가 협상을 통해 15일 동안 조정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광주지역은 10개 회사에서 모두 999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故 안병하 치안감 친필메모 공개

유족 전임순 여사 기증협약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국장을 맡았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작성한 친필메모가 처음 공개됐다. 이 메모에는 신군부가 일부러 시민들을 자극해 5·18이 일어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10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고(故) 안병하 전남도경국장 유족 전임순 여사 기자회견과 유품 기증협약식을 열었다.

안 치안감의 유족은 이날 안 치안감이 남긴 친필 메모(A4용지 8장 분량)와 치안감 추서 계급장·임명장, 사진 20여장을 기록관에 기증했다.

안 치안감이 1988년 국회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며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친필메모에는 ‘광주사태 발생동기’로 ‘과격하 집안으로 인한 유희사태로 시민 자국’ ‘악성 유언비어 유포 등 시민들을 극도로 자국’ ‘김대중씨 구속으로 자국’이 적혀있다. 안 치안감은 청문회가 열리기 한달 전인 1988년 10월10일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대해 부인 전임순 여사는 기자회견에서 “1980년 5월 17일 학생회장(박관현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안병하 국장을 방문해 마지막 촛불시위를 허락해 달라고 하자 안 국장은 고심 끝에 허락해 주셨다고 했다”며 “그날 촛불시위는 아무런 충돌없이 무사히 끝났고 10여일 만에 집에 돌아온 경찰국장은 ‘광주는 이제 데모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편하게 주무셨다”고 밝혔다.

안 치안감이 치안을 담당하던 5월17일까지는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사실상 없었지만 계엄군이 투입된 18일 이후부터 급격하게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2
해질녘 19:26
달 뜨는 시각 03:08
달 지는 시각 14:55

비 내리는 주말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11/25	보성	구름많음	8/21
목포	구름많음	11/21	순천	구름많음	11/22
여수	구름많음	12/20	영광	구름많음	9/22
나주	구름많음	9/24	진도	구름많음	9/21
완도	구름많음	11/21	전주	구름많음	11/24
구례	구름많음	9/24	군산	구름많음	11/21
강진	구름많음	9/22	남원	구름많음	9/24
해남	구름많음	8/22	흑산도	구름많음	10/18
장성	구름많음	9/2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	동~남동 0.5~1.0
남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5
남해 먼바다	동~남동 0.5	동~남동 0.5
남해 서부 먼바다(동)	동~남동 0.5~1.5	동~남동 0.5~1.5
남해 서부 먼바다(서)	동~남동 1.0~1.5	동~남동 1.0~1.5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4:04 16:47	10:45 23:23
여수	12:31 --:--	06:19 18:39

◇주간 날씨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15/21	16/22	15/27	16/26	15/26	18/24	17/24

◇생활지수

	관심
	매우높음
	보통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새출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30년만에 명칭 변경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30여년만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이름을 바꿨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우석환)는 10일 광주지방검찰청 운영준차장검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현판 제막식을 했다.

〈사진〉

광주출입국사무소는 지난 1989년 광주출장소에서 승격된 이후 30여년간 해당 명칭을 유지해왔다. 이번 명칭변경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일본입국

관리국을 모방하고, ‘관리’라는 문구 자체도 일제의 잔재라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따라 전국 19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인천공항,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6곳의 명칭이 각각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바뀌고, 광주 등 13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